



‘단 한 번으로 인생 좌우하는 수능, 운명의 날이었다’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영국 BBC방송은 어제 치러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운명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고사장 앞에서 여학생들이 복을 치며 선배들을 응원하고 사찰에서 절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육의 진면목이다.

수능은 한국 교육의 불합리성을 대표한다.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시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고 반인권적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실수나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성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한두 문제로 등급이나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실수 여부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처럼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좌우하는 시험에 승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수한 학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험,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험은 교육 왜곡일 뿐 아니라 인간 모독이다.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인생이 걸린 경쟁에서 친구는 적이 된다. 학생들은 사교육의 포로가 되어 친구를 물리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학교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는 장소가 아니라 ‘공부 감옥’으로 전락했다. 또한 수능은 본질적으로 비교육적 속성을 띠고 있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단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단 하나의 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을 찾기 위한 사고력의 향상이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수능이 요구하는 대로 정답의 울타리에 갇혀 기계적 사고를 해야 하고 그런 사고에 갇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수능과 대학입시가 초·중·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공부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수능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성적은 점수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전형 도구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은 인간이 평등하며 그런 것으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수능에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 돼야 하는 현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공지할 내용이 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공익제보자가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고 투명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의로운 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 공익제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911>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사흘 동안 연석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지역구 의원을 260석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까지 비례대표를 보충해주는 이른바 '이병석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평가로) 사람 잘라서 그 자리에 내 사람 심겠다는 욕심이죠. (문재인 대표가) 전략공천하려는 거 아니에요.” (최규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의원들을 평가해 '하위 20%' 안에 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혁신안을 채택했습니다. 비주류 측은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 측의 공천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꺼내든 겁니다. 주류 측 의원들은 이미 채택된 공천 혁신안을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1시간여 동안 단독 회동을 갖고 문 대표의 2선 퇴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세월호 안내 방송)

세월호 참사 당시 이 방송을 틀어놓고 세월호를 가장 먼저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퇴선 명령조차 없이 혼자 탈출하기 급급했다, 승객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이는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 김용민의 새 책 많은 관심 바랍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 예스24 <http://goo.gl/ndhoaj>
- 알라딘 <http://goo.gl/AkxzHD>
-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 인터파크 <http://goo.gl/tvdp7E>
- G마켓 <http://goo.gl/HDXK0l>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کم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문의] kimyongminpd@gmail.com

[한국일보] 광우병 파동 이후 최대 예상... 내일 서울 10만 집회

내일 서울에서 10만 민중의 분노가 집결된다. 노동자, 농민 등이 집결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각종 이슈들이 점화된 상태에서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서울 도심에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주최 측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화문 일대에만 대회 참가자 경찰 추산으로만 8만 명, 경찰력 2만 명을 합해 최소 10만 명이 모여 대치할 예정이다.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에 따르면 내일 낮 1시부터 서울광장과 태평로, 서울역광장, 마로니에공원 등 서울 도심 5개소에서 노동자와 농민, 빈민, 재야·청년학생 등이 주관하는 부문별 대회가 열린다. 최대 10만 명(주최 측 추산)으로 예상되는 참석자들은 각 집회를 마친 후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다.

■ 본 대회 민중총궐기
2015.11.14(토) 4시 서울 광화문

■ 각 사전 부문대회
[서울시민] 2015.11.14(토) 1:30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학생] 2015.11.14(토) 2:00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노동자] 2015.11.14(토) 2:30 서울(시청) 광장
[농민] 2015.11.14(토) 2:00
[빈민] 2015.11.14(토) 1:00
[성소수자] 2015.11.14(토) 1:00

이런 가운데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에 노동자 농민 등 경남도민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총궐기 경남준비위원회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노동자 7천여 명, 농민 3천여 명, 시민사회 1천여 명이 상경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1만 여명이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버스를 빌려서 상경을 준비하면서 경남지역의 버스 대여가 불가능해지자 부산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버스를 대여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경향신문] 승객 버린 선장만 죄? 총체적 구조 실패한 당국은 잘못 없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무기징역 판결. 이걸로 끝내고 싶을 거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측 관계자들의 책임 소홀을 묻는 법의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 진행 중이라서? 아니다. 기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은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력을 집중한 곳은 세월호 선주인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유병언 검거'에 쏠렸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가 '떡통'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 문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군납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항공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는커녕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조선일보] 가뭄이 복권시킨 '4대강'

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인지를 드러내는 기사. 1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소개하겠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야당과 좌파, 환경 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도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관측 이후 최저 수준(평년 대비 65%)의 비가 내린 올해, 16개 보(泐)에 담긴 11억7000만톤의 물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4대강의 복권(復權)" "한때는 '재앙' 같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가뭄 속 단비 역할" 등과 같은 말도 나온다."

어처구니없다. 한겨레 기사를 같이 봐야 한다.

[한겨레] 당정은 공주보 물 쓰라지만...충남도 "가까운 곳 물 쓰자"

정부가 보령댐에 이어 예당호에도 공주보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공주보에서 물을 공급하는 방안 외에 삼교호·곡교천, 유구천·지천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왜냐.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의 말을 들어보자. "금강 공주보가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한 삼교호·곡교천, 수질이 좋은 유구천·지천의 물을 사용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쪽, 우선 4대강 물 정수 안 한 상태에서 마셔놓고 기사를 써도 써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뿔난 영남의원들 "앉아서 당할 순 없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간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당선된 걸 기억하시나요." 새누리당 한 영남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달성군 구석구석을 누볐지만 무소속 후보를 꺾지 못했다. 이 의원은 "TK 지역엔 막대기도 쏘면 당선된다는 식으로 공천을 하면 큰 오산"이라며 "전략공천을 하면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조만간 행동동일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총선에서의 변수, 야당이 국민 지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당의 자중지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판단, 일전에 해드린 바 있었다. 그대로 돼 가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차대통령, '배신·진실·은혜' 1980년대 부터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게 해 달라"고 발언한 뒤 여권(與圈)에선 박 대통령의 과거 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실한 사람'에 대한 생각은 1989년 11월 6일 일기에 나온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소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고 적었다. 2007년 자서전에서 "고마운 사람은 나에게 물 한 잔 더 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진실한 태도로 일관된 사람들"이라며 "아버지 사후(死後)에 밑바닥까지 경험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은혜' 역시 1989년 4월 5일 일기에 나온다. 그는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반드시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크고 작음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품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인품이 그릇된 사람은 그 은혜를 잇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기 모음집과 자서전 뒷면 겉표지에 각각 '이 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남은 세월이 추가되면서 끝을 맺게 될 거다' '이 책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적어놓았다. 술한 공약 위반으로 상징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월호에 대한 진실, 당신을 뽑아준 어르신 층에 대한 은혜는 어디다 숨겼는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동아광장/김형준]대통령부터 '선거 중립' 약속하라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의 칼럼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기는 것이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국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 장관직을 내놓고 총선에 뛰어드는 무책임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무서운 분노와 절망감에 빠진 청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런데 슬픔을 멈추게 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욕하면서도 정치권에 주문을 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계도 민주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 심판하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착한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만으로는 정치권을 바꿀 수 없다. 대통령만이라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담대한 설득의 길을 가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채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과 만나 대화하고 설득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신뢰의 시작은 박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된 공무원

선거 중립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여당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독립 선언을 해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할 말은 해야 한다." 읽다보니 느끼는 건데 정말 태도 없는 소리가 될 거 같다. 불통명한테는.

[조선일보] 반기문지지자들 '親潘 연대' 창당 준비

가십 하나 소개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자 일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최근 선관위에 '친반 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때만 되면 뗀다방이 출몰하기 마련인데, 친반 연대도 그러한지 주목된다. 한편 선관위에는 이 밖에도 '거지당(巨智黨)'도 이름을 올렸다. 길거리 '거지'가 아니라 '큰(巨) 지혜(智)'를 뜻한다.

[조선일보] 11월 12일... 1948년 戰犯 7명 교수형 선고받은 그날, '도쿄재판 검증하겠다' 나선 日 아베정권

1948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도쿄 옛 육군성 강당. 재판정에서 기자·방청객 1000여명이 숨죽이고 듣는 가운데 호주 출신 윌리엄 웹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모의는 최고의 범죄다. 그에 참가하거나 가담한 자는 유죄(有罪)다." 이어 A급 전범(戰犯) 25명을 하나씩 호명했다. 전쟁을 모의하고, 침략을 실행하고, 인권을 유린한 죄로 7명이 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20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았다. 전후 장장 925일에 걸쳐 진행된 '도쿄전범재판'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67년이 흐른 2015년 11월 12일, 일본 국민은 "자민당이 도쿄재판을 검증하기로 했다"는 기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자민당이 창당 60년을 맞아 이달 안에 도쿄재판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아베 신조 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검증한다'는 것은 도쿄전범재판의 진행 절차와 판결 내용을 다시 살펴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급 전범의 명예회복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역사 앞어치기, 일본에서 생긴 이 병이 한국으로 전염된 모양이다. 침략전쟁 주동자 부역자들 명예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일보] [사설] 日 방산은 민항기 개발까지, 우리는 온통 방산 부패

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뉴스로 이어간다. 한국일보 사설부터 보자. "일본에서는 53년 만에 민항기 시험비행에 성공해 열도가 흥분에 휩싸였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술개발을 독려해온 결과다. 일본 정부는 관련 대학에 연구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의 무기 개발 공동협력을 통해 부품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전경련 같은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련(經團連)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방위산업체의 빈약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지만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만연해있는 방산비리가 더 큰 문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군과 방산분야 고위 인사들이 무기중개상 뇌물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어제까지 보도된 내용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의 수표를 사용했으며, 최 전 의장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승려도 함씨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국방과학연구소 정홍용 소장의 아들은 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유학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 거론된 두 명의 함 씨는 동일인이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측은 “아들이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추가보도가 있다.

[중앙일보] 무기중개상 함씨, 최윤희 전 의장 아들에게 1억 사업자금

재작년 초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도입을 증개한 무기중개업자 함 모 씨의 자금 1억 원가량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아들 쪽으로 흘러갔다는 진술을 군과 검찰이 확보했다. 함씨가 지난해 9월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수표로 2000만원을 준 뒤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건과는 별개다. 함씨가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정 소장 아들을 직접 소개받은 뒤 유학비를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 소장이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에게 인사시켰고 이후 함씨가 유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로 4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군 지휘부 가족 향한 방산 로비 전면 수사하라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쯤 되면 군 최고 간부 가족을 상대로 한 무기 중개상이나 방산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방산 비리는 군과 방산 업체, 무기 거래상 간의 학연·지연·군무 연줄로 얽힌 유착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방산 로비의 속성상 여기에 가족까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동아일보] 육사 동문이라서... 동향이니까... 사이버 기강해이 심각

군의 기강이 그야말로 개판이다.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위협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령관 조성직 소장 이야기다.

사이버사령부 내 한 부서의 참모를 맡고 있는 육사 출신 B 대령은 최근 부하 여군무원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여군무원과 노래방에 갔다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나 처벌은 없었다. 같은 육사 출신 후배라는 이유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군 출신 C 중령은 2월경 회식 자리에서 부하 남자 부사관에게 “같이 (일을) 잘 해 보자”며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고 한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사관의 신고를 받은 기무 부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조 전 사령관은 3월 곧바로 조사본부의 담당관을 불러 정식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C 중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한다.

[한겨레] [단독] 중, 북 접경 2곳 23년 만에 ‘국가급 경협특구’ 승인

중국 국무원이 울봄 북한과 접경지대인 압록강변 지안(집안)과 두만강변 허룽(화룡)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 국무원이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을 승인한 건, 1992년 단둥과 훈춘 2곳 승인 이후 23년 만이다. ‘변경경제합작구’는 중국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급 개발구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금껏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경색됐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등의 정세 인식과 달리, 북-중 경제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수혜 관계’를 넘어 ‘상호협력과 연계성 강화’ 쪽으로 명확한 방향을 잡았음을 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고 한국은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부산/경남]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행보 마찰

안상수의 흥준표를 향한 대반란, 표면화되고 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흥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내 17명의 시장 군수가 반대하는 광역시 승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창원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5대 핵심기구 관계자와 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로 무대를 옮겨 토론회를 열었다.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시를 합쳐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면적 747km², 인구 108만 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만318달러 등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창원이 빠져나간 경상남도에는 크게 쪼그라든다. 이게 안상수식 반란이다. 당연히 흥준표 지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비교적 선선하겠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동해안과 남해안·제주도에 최고 60mm, 호남과 영남 내륙 10~40mm,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13~14도로 어제보다 낮은 수준이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칼럼 “뫄난 ‘고향 사랑’”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베트남 구국의 영웅 호찌민은 평소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비로소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를 털어놓았다.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로비를 할까봐 걱정해서였다. 일본의 정치인 요시다 시게루는 전쟁이 끝나자 전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단기간 복역한 뒤 정치에 복귀했다. 그는 다섯 차례 총리를 역임하면서 전후 자민당 보수정치를 이끌었다. 공과가 함께 많은 정치인인데, 고향과 국가에 대한 시각 하나는 배울 만한 점이 있다. 그는 도쿄 부근 요코스카 출신이었다. 언젠가 요시다에게 동향 사람이 찾아와 고향 로비를 하자 요시다는 호통 쳤다. “나는 내 고향의 정치가가 아니고 일본의 정치가다.” 국회의원이려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새누리당에는 나라 걱정은 않고 애향심만 넘치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진정한 애향인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행동이 아닌가. 국회의원은 나라일 하라고 뽑힌 사람들이다. 지역을 위해서는 시·도의원, 구의원이 얼마든지 있다. 자기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지역 챙기기, 자기 챙기기에 몰두하는 자는 국회의원, 장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죄 하나만 해도 큰데, 게다가 국가예산까지 사적으로 빼돌리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석간에서 뵈겠다.